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 배경과 전망

정 영 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2·13 핵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6월 미국무부 힐 차관보가 방북하고 6자회담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미관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북한의 여타 대외관계 확대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것은 북한이 외교부문에서 강조해 왔던 미국 '빚장'을 풀기에 성공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미국 '중심고리'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대외적 압박을 강화하는 외교적 행보일 수도 있다. 지난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의 국가수반자격으로 몽골, 러시아, 알제리, 이집트, 싱가포르, 에티오피아를 순방하였으며, 같은 달 박의춘 외무상이 제1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특히 10월 들어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 활동이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이탈리아, 시리아 방문
- 농 득 마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김영일 내각총리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순방
- 류원산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방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몽골정부 경제대표단, 싱가포르 투자시찰단 등의 방북과 북한 각급 경제 대표단 해외방문을 통한 대외경제협력 활동 확대
- 북한-EU 평양경제토론회 개최
- 제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유럽 6개국 18개 회사 참석
- 몬테네그로, 아랍에미리트, 도미니카, 스와질랜드, 과테말라와 수교하고 미얀마, 니카라과와는 외교관계를 복원

이 중에서도 농 득 마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북은 지난 1957년 호치민의 방북 이후 50년 만에 이루어진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다. 북한과 베트남 양국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나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적 발전 추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2001. 7)과 베트남 국가주석 르영(2002. 5)의 상호방문 이후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이어졌다.

이중과세방지협정·투자보장협정·민-형사-사법공조조약·해양수송에관한협정(2002. 5)과 표준화, 도량형 품질감독협정(2003. 11), 품질관리분야협조계획(2004. 4) 체결 및 제4차(2001)·제5차(2003)·제6

차(2006) 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등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금년 중에도 북한 직총 대표단(3월), 베트남 신문 대표단(4월), 베트남 인민회의 대표단(6월), 베트남-조선친선협회 대표단(8월), 북한 농근맹 대표단(8월),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 대표단(9월) 등 6건의 대표단 교류가 있었다. 북한은 이번 농 득 마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문으로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으로부터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경험을 도입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서방 외교 확대 차원에서 북한이 EU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 EU는 금년 3월 「EU트로이카」 대표단 방북을 시작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정치대화를 재개하면서 비교적 활발한 인적교류를 벌여 왔다. 1998년 시작되었으나, 2005년 EU의 북한 인권결의안 UN상정, 2006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북한과 EU간 정치대화가 재개되었다.

현재까지 북한과 EU간 교류는 EU본부·EU회원국·개별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북한은 2·13 합의 이행의 진전과 함께 대 EU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교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서방외교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이 「로동신문」, 「조선신보」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관계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것 등은 이러한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체제보호를 위한 정치적 외교 노력에도 일정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김일성기금」 창설이 대표적 예이다. 조선중앙방송(10. 18)에 따르면, 「국제김일성기금」 창설은 “「국제김일성상」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주체사상 연구보급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북한이 1993년부터 해외 친북단체 및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여해 온 「국제김일성상」의 권위를 제고하고 주체사상 연구보급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체제보호 외교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 그물’에서 벗어나서 외교부문에서 미국 ‘중심고리’를 완전히 풀고 국제적 고립탈피와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북한은 테러지원국 및 대 적성국 교역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압박할 수 있는 외교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다양한 외교적 활동을 벌여 북한 주민들에게 대내적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체제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미래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김정일 체제의 권위와 위상제고를 통한 체제 안정성을 높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우선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 외교활동 증대→ 서방외교 및 여타지역 외교 확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추동이라는 외교활동에 역점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활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서 점진적 해법을 통해 ‘핵 대화’ 국면을 장기화해 나가고 북미 양자 대화 채널을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 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는 테러지원국 및 대 적성국 교역법 해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테러지원국 및 대 적성국 교역법이 해제된다면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받으면서 국제적 협력 및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안보(군사)대화로 발전시켜 북미평화협정 체결로 유엔사 및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북한의 외교적 당면과제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록 여러 공식매체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으로 북일간의 관계정상화를 재촉하는 그들의 외교적 '구호'라고 할 수도 있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조총련 자금문제'라든가 '대일청구자금'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난 해소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 목표 추구에 있어서도 외교적 급선무 중에 하나이다.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대를 최대한 이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도출해 내는 외교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중,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지닌 채 교류협력관계의 발전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북한은 이러한 한계성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협력국가로 베트남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은 고유의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해나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베트남으로부터 이러한 개혁개방의 경험을 전수받더라도 비교적 체제위협의 위험성은 적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 경험의 전수를 위해서나 사회주의체제 협력외교 차원에 있어서도 베트남과의 외교를 보다 활발히 확장해나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입장으로는 중국의 부정적 영향력 침투를 차단하고 조정해나갈 필요성에서도 베트남과의 협력관계 확대는 고무적일 수 있다.